

'아동학대 유죄' 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행정청, 보육교사에게 자격 취소 처분 내려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헌법소원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은 받은 보육교사에게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보육교사 A씨 등 2명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경북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6월에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행정청은 이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을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 등은 행정청을 상대로 자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행정소송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해당 사건의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자격을 취소한 것은 체계 정당성에 반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던 사람이 그 자격을 취소 당한 결과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위 공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오유니기자



여수해경, 선박 화재 사고 대응 훈련 실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여수시 국동항에서 계류 선박 화재 사고 발생을 대비한 민·관 합동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진도소방, 2023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구급대응훈련 실시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대형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지난 26일 진도군 무형 문화재전수관에서 '2023년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구급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소방, 전기화재 인명피해 저감 '트래킹 클리너' 운영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봄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전기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자 '트래킹 클리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무안소방, 고향사랑 기부주택 화재안전 꾸러미 지원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홍보하고 설치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순천경찰, 대학 내 마약류 이용 성범죄 등 예방 활동

순천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대학 내 마약류 이용 성범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대학 인권센터와 간담회 및 합동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주동부소방서-대구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광주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대장 서봉열, 이항욱)는 지난 26일 광주동부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대장 이재춘, 이옥수)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슬비기자

소아 야간·휴일 비대면 재진 원칙...의학적 상담은 허용

6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3개월 간 계도 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등 초진·약 재택수령 수가 30% 가산, 본인부담 ↑...마약류 처방 금지

다음달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아의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에 한해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심·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집에서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이같이 확정하고 오는 6월1일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전까지는 불법이었으나 감염병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되자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

오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법적 근거는 사라지고 불법이 된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제한적인 시범사업 형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 대상은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

자로,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동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제한한다. 만성 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진료 가능하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선물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포함한다.

인전 백령도, 연평도 등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초진부터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심·벽지 환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일 때,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대상자,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및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감염병 격리통지서 및 통보 메시지 수신자 등으로 자격을 한정했다.

감염병예방법 상 1·2급 감염병 확진 환자도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초진을 허용한다.

만18세 미만 소아 환자도 재진이 원칙이다. 다만 휴일과 야간, 즉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처방은 할 수 없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회 이상 대면 진료 후 희귀질환자가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이날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진료료의 30%를 더해 책정하기로 했다. 야간·휴일의 소아 의 초진 상담 시에도 동일한 수가가 적용된다. 비대면진료를 담당할 약국에도 약국관리료 및 조제기분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으로 관리료를 가산해 지급한다.

비대면진료 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도 그만큼 올라간다. 통상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대면진료비는 대면진료비의 39% 수준이 된다.

비대면 진료는 화상 진료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통화도 가능하다. 기존 비대면진료 플랫폼 앱에서 가능했던 약국 자동배정은 금지된다.

환자위치 기반 모든 약국을 표시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수령과 대리수령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감염병 환자, 심·벽지 환자, 희귀질환자는 재택수령도 가능하다.

이슬비기자



'동물 비물건화' 법률 개정하라

동물해방물결 등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경문 앞에서 동물 비물건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

"충간소음에" 흥기 들고 협박한 50대

충간소음 없음에도 범행

충간소음이 없음에도 술에 취해 흥기를 들고 이웃집에 찾아가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에 김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B(20대)씨에게 흥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로 아랫집에 찾아가 "충간소음이 난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는 등의 말과 함께 위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혼자 거주 중이었으며 충간소음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 등을 저지른 점을 파악, 재범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뉴스